

---

# 균형발전지표 현황 및 향후계획

---

2019. 9. 19.



대통령 직속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## 1. 배경 및 필요성

- 문재인 정부는 「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」에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키로 발표(18.2.1)
  -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·평가하고, 균형발전정책 사업 평가 및 환류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
-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발전정도, 잠재역량,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제고
  -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평가에 활용 가능

## 2.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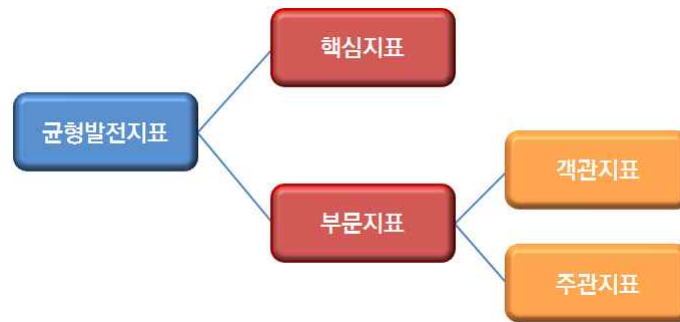
- 지역의 객관적·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
  - ① 지역의 발전정도, 잠재역량,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을 종합 진단
  - ②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·평가하고 객관적인 삶의 질 여건을 진단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 추진
  - ③ 재정사업 지원 대상 선정, 자원배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
  - ④ 해당지역의 특정 지표 취약 시, 각 부처 지역사업에 정책수요 반영
  - ⑤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(NABIS)을 통하여 균형발전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\*

※ (일본)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 도출과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(지역경제사회분석시스템: RESAS)에서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서비스와 각종 맵,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

## II 균형발전지표 구성(안)

- 균형발전지표는 핵심지표와 부문지표로 구성되고, 부문지표는 다시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성

< 균형발전지표 체계도 >



### 1. 핵심지표

- 지역 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지표인 **인구와 경제** 관련 2개 지표(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, 최근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)로 구성
- (인구) 인구증감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여부를 파악하고 통계청의 통계자료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40년('75~'15)으로 산정
  - ※ 일본의 인구감소지역 산정기간은 45년
- (경제) 통계의 정확성과 가용성,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선정
  - 1인당 지역내총생산(GRDP)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고려되지 않고,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\*을 반영하는데 한계
    - \* 행정구역과 통근권이 불일치하고,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공장이 도시 외곽(도 지역)으로 이전하여 생산소득은 실제 지역소득과 괴리 발생
  - 1인당 지역총소득(GRI)은 지역의 역외유출을 고려하여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나 시군구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
  - 한편, 재정자립도는 예산기준과 결산기준이 있는데, 실제 예산을 집행한 뒤 산출되는 결산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수치로 평가됨

**<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>**

구분	지표
핵심지표	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, 최근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(결산기준)

## 2. 부문지표

-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**필요한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를 부문별로 객관 및 주관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**
- **(객관지표)** 지역의 생활여건을 **8개 부문으로 객관적으로 측정·평가** 하기 위한 **41개 지표**들로 구성
  - 주거, 교통, 산업·일자리, 교육, 문화·여가, 안전, 환경, 보건·복지 8개 부문으로 구성

**< 균형발전지표 부문별 객관지표 >**

부문	객관지표
주거(5개)	노후주택비율(-), 빈집비율(-),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(-), 상수도보급률(+), 하수도보급률(+)
교통(4개)	고속도로 IC 접근성(-), 고속 고속화철도 접근성(-),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(+), 도로포장율(+)
산업·일자리(6개)	사업체수 증감률(+), 종사자수 증감률(+), 지식기반산업집적도(+), 상용근로자 비중(+), 특허건수(+),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(+)
교육(4개)	유아(0-5세)천명당 보육시설수(+), 학령인구당 학교수(초중고)(+),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(+),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(+)
문화·여가(6개)	인구십만명당 문화여가시설수(+), 인구천명당 객석수(+), 인구십만명당 예술활동건수(+),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(+),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(+),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(+)
안전(4개)	소방서 접근성(-), 경찰서 접근성(-), 구조대원 일인당 담당주민수(+),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(+)
환경(4개)	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(+),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(+), 녹지율(+), 1km <sup>2</sup> 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(-)
보건·복지(8개)	65세이상 1인가구 비율(-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(-),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(-),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(+), 인구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(+),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(+),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(+),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(+)

- (주관지표)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10개 부문 22개 지표들로 구성
- 종합, 주거, 교통, 산업·일자리, 교육, 문화·여가, 안전, 환경, 보건·복지, 시민참여·공동체 10개 부문으로 구성

**< 균형발전지표 부문별 주관지표 >**

부문	주관지표
종합(2개)	현재행복도(+), 지역생활만족도(+)
주거(2개)	주거상태 만족도(+), 기초생활여건 만족도 (+)
교통(1개)	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 편리 만족도(+)
산업·일자리(2개)	지역내 일자리 충분 정도(+), 노력에 따른 소득 창출 정도(+)
교육(3개)	초중고생 학교 교육 여건 만족도(+), 어른 대상 교육기회의 충분 정도(+)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)의 충분 정도(+)
문화·여가(2개)	문화 및 체육시설의 접근 편리성(+), 문화 및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만족도(+)
안전(3개)	자연재해 및 재난 등 예방 및 대비책 충분도(+), 밤거리 안전도(+), 소방 등 사회안전체계의 충분도(+)
환경(3개)	소음, 악취,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서비스 만족도(+), 자연환경 만족도(+) 미세먼지에 대한 생활 피해 정도의 낮음(+)
보건·복지(2개)	병의원 및 약국 이용 편리성(+), 노약자·장애인 복지서비스 만족도(+)
시민참여·공동체 (2개)	도움을 청할 사회적 관계 유무(+), 지역 소속감(+)

### III 균형발전지표의 측정 및 시범적용(안)

#### 1. 핵심지표

- 핵심지표는 통계청 및 지방자치통합재정 등의 행정 통계자료를 통해 구축
- 두 개의 핵심지표를 활용하여 지수 값을 도출
  - 표준화는 Z-score를 이용하였으며, 표준점수는 평균이 0, 표준편차가 1이 됨

$$BDI^r = \alpha PR^r + (1 - \alpha) FT + 5,$$

$BDI^r$ : 지역  $r$ 의 균형발전지수,  $\alpha$ : 인구증감률의 가중치

$PR^r$ : 지역  $r$ 의 40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,  $FT$ : 지역  $r$ 의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.

※ 단, 두 변수의 가중치는 동일하다고 전제( $\alpha = 0.5$ )하고, 지수 값이 음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+5를 하였음

#### □ 광역지자체

-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르면 하위 25%는 강원, 경북, 전북, 전남, 상위25%는 경기, 울산, 인천, 서울로 나타남

< 균형발전 핵심지표를 이용한 광역지자체 지역구분(예시) >

그룹	지역
상위25% (4개)	경기도, 울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
9개	광주광역시, 경상남도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부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
하위 25% (4개)	강원도, 경상북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

※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하여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산정을 위한 1975년 인구는 통계청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자료(연기군 인구)로 산정

## 2. 부문지표

### □ 객관지표

- 균형발전지표 중 부문별 객관지표 파악을 위해 각종 행정통계 자료 등을 수집, 분석하여 17개 시·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전반적인 **현황**을 파악

### □ 주관지표

-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적·사회적 여건에 대한 주관지표의 파악을 위해 지역 주민의 **만족도 관련 전화설문 실태조사**를 통해 수집

- 만 20세이상 성인 남녀 약 22,100개 표본 전화면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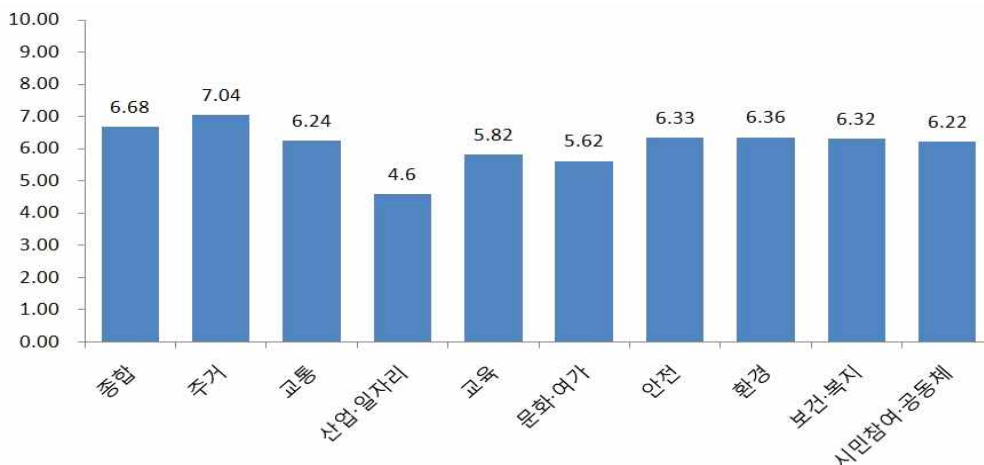
-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샘플 수 배분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 $\pm 0.7\%p$

※ 인구비례할당을 통해 조사할 경우 지역별 샘플수가 광역시와 대규모 시 등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조사가 편중됨에 따라 광역시 표본수를 줄이고 지방에 더 많은 표본을 시군 규모별/성격별 차등 할당(서울 1,000개, 그 외 광역시는 인구별 차등화, 50만 이상 시군 160개, 20~50만 140개, 20만 미만 120개, 군 지역 100개 할당)

-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행복도와 지역생활만족도로 구성된 종합 부문은 6.68점(10점 만점)이었는데, 주거 부문이 7.04점으로 가장 높고, **산업·일자리 부문이 4.60점으로 가장 낮음**

#### < 주관지표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>

(단위: 점(10점 만점), N=22,100)



-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행복도는 6.51점(10점 만점), 지역생활 만족도는 6.85점(10점 만점)임
-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(4.27점), 소득창출 정도(4.93점),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피해(5.42점), 문화 및 체육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만족(5.48점)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

< 주관지표 세부지표별 만족도 조사 결과 >

(단위: 점(10점 만점), N=22,100)



-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학적인 주관지표 확보방안을 통계청과 마련할 계획
- 22,100명의 표본 수는 기초지자체의 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



## IV 균형발전지표 관련 향후계획

- 사업 수립, 재정 지원, 평가 단계에서 정책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
  - 지자체에서 주민 삶의 여건에 대한 객관적·주관적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, 또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
  - 특정한 부문의 지표가 취약한 지역에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부족한 부문에 대해 정책적 보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환류
  - 정책 이전 단계에 만족도가 낮았던 지역이 정책 집행 후에 개선효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
- ☞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재정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
- 통계청과 연계·협력하여 주관지표 구축
  - 통계청 지역통계 담당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주관지표 구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
  - 지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조사와 연계, 균형발전지표의 주관지표 항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
- ☞ 통계청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조사 표준화 방안과 균형발전 주관 지표와의 연계방안 마련('19년 하반기)
-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(NABIS)과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자료 제공
  - 공간정보와 통계정보를 융합한 지역 정보 제공 플랫폼인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(NABIS)에 정보 제공
- ☞ NABIS에 균형발전지표(핵심, 부문) 정보제공('19년 하반기)